

보도설명자료 (‘12. 9. 5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"R&D 지원금은 눈먼 돈" 4년간 433억 썼다
(‘12. 9. 5, 동아일보 14면)

1. 기사내용

- ‘08년~‘11년 지식경제 R&D 연구비 유용·횡령이 166건 발생하였으며, 환수 결정액은 433억원이고, 실제 환수금액 302억원임
 - 두산인프라코어, 전자통신연구원, 미리넷솔라 등 연구기관의 연구목적외 사용 등으로 연구비 유용·횡령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연구 개발후 연구비 유용·횡령 등의 이유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(‘08년~‘11년)은 전체 지식경제 R&D 예산(16.5조원)중 0.3%인 433억(166건)이며,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중

* ‘08~‘11년 지식경제 R&D 총 과제수 및 예산 현황 : (‘08) 7,395개, 3.6조원
→ (‘09) 7,971개, 4조원 → (‘10) 7,243개, 4.4조원 → (‘11년) 6,273개, 4.5조원

- 433억원중 302억원은 환수되었으며, 131억원도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음

- 이중,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의 경우 동 기간중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*에 의해 납부가 유예되므로, 동 절차 완료후 납부 예정 (67억원)

*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,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의 사항이 포괄적으로 금지 (회생신청 후 회생인가 결정 기간 : 약 1년 소요)

- 검찰조사 등 법적조치가 진행중인 과제의 경우 법원 판결 완료후 납부 예정 (30억원)
- 기타 행정절차로 인해 환수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조속히 동 절차를 완료하여 납부토록 유도 (34억원)
- 기사에서 인용된 사례 중, 두산인프라코어와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는 환수금을 100% 환수 완료하였으며, 나머지 기관도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

- 그동안 지경부는 R&D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

- ①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(RCMS) 도입(‘10.6월)하여 확산중에 있으며

* RCMS(Real-time Cash Management System) : 기존에는 연구비 지급 후 과제 종료·정산시점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를 금융권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,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사 전자전표 등에 의한 정산증빙 자료의 전자화로 관리효율성과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Paperless 시스템

- ② 연구비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유용·횡령 금액의 5배 이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시행(11년)하고

-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(3년~5년)

※ 기타 연구비 관리 제도 개선 조치 : 위탁정산제도, 연구개발 참여기업 부실 위험 심사, 불시점검반 운영 등을 시행중임

- 앞으로도, 지경부는 연구비 유용·횡령 등이 적발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, 검찰 및 감사원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김남규 과 장 (02-2110-5181)

안여선 주무관 (02-2110-5183)